

시론



주홍

치유예술가·샌드앤미디어아트스튜디오

광주에는 5·18민주광장이 있다. 불의에 저항하며 햇불을 들고 시민들이 모여 발언하고 토론한 곳이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총과 탱크, 헬기의 동원에도 독재에 목숨을 바쳐가며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켰던 광장이다. 계엄군이 총을 쏘면 더 모여서 저항하는 광주시민들이 있고 정의의 외치며 발언하는 곳, 진실규명을 외치는 곳, 예술가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다.

나는 민주광장을 사랑하는 광주 시민이요, 화가다. 2015년 5월27일 민주광장에서 밤을 새워 점을 찍어 가며 윤상원 열사를 그렸다. 그 작품의 제목은 '광주의 별'이었다. 이 식을 치르듯 아침까지 반짝이는 점을 찍어 작품을 완성하고 금남로를 걸었다. 그리고 그 광장이 얼마나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곳인지 스스로 느끼게 됐다. 그 후 이 광장에서 친구예술가들과 함께 이 영감을 나누고 싶었다. '민주광장에서 100명이 모여 그림을 그리며 이런 5월의 영감을 나눌 수 있다면...' 이런

두 개의 햇불

꿈을 갖고 실현됐다. 5·18기념재단에서 금남로에서 2014년 그렸던 세월오월 경개그림 100인의 릴레이아트를 민주광장에서 이어가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아트'는 그렇게 매년 5월이면 전국의 예술가들이 민주광장에 모여 광주의 오월을 주제로 걸개 그림을 그리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행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5·18기념재단에서 100인의 오월정신 릴레이아트 행사를 지원할 수 없게 됐다고 연락이 왔다.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타지에서 참여하는 작가들의 차비와 재료비, 숙박비, 그리고 다음 정의를 외치며 발언하는 곳, 진실규명을 외치는 곳, 예술가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다.

5월18일 오후 5시18분, 그날 이 시간은 분수대 주변에 너무 행사가 많아서 우리는 광장 옆쪽 ACC어린이문화원 부근에서 광장방향으로 나란히 길을 내고 그림을 그릴 것이다. 이렇게 민주광장은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창조적인 발언의 장이 된다. 올해 100인의 오월정신릴레이아트 주제는 '1931518-100년'이다. 눈치 빠른 분들은 숫자만으로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1919년 3월 1일 100년 전 독립선언문을 기억하고 한반도의 미래 100년을 상상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시민정신이 살아있는 5·18민주광장을 사랑한다. 작년 7월 뉴욕의 광장에서 실형적인 퍼포먼스 했다. 광주민주광장에서 함께 했던 예술가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드로잉퍼포먼스를 했다. 즉 '광주민주광장과 뉴욕 타임스퀘어 이 두 군데의 광장 중 어디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곳일까?'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두 명의 경찰을 만났고, 그들은 우리 일행들의 가방을 뒤졌으며 총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모두 돈을 내고 하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있었다. 내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뉴욕의 타임스퀘어

는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었고, 광주의 민주광장은 시민의 자발성으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광주 5·18민주광장의 위대한 정체성이다.

올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다. 광주 메이홀에서 3cm의 작은 크기의 햇불을 든 주먹밥아줌마 배지를 만들었다. 작년 부터 흥성담 작가의 오월관화 중 햇불행진의 주먹밥아줌마 배지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팝아트붓초각가 고근호 작가의 대중적인 감각으로 플라보레이션한 결과물이다.

나는 작년에 뉴욕에서 93.5m에 달하는 거대한 조형물, 햇불을 든 자유의 여신상을 보았다.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가 미국 독립100년을 기념해 선물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광주시민의 자생적 힘으로 만들어진 작은 오월배지도 오른손에 햇불을 들고 있다. 머리에 주먹밥을 이고 아래로 춤을 추며 웃고 걸어가 있다. 파란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붉은 햇불을 들고 걸어가는 아줌마는 오월 대동정신을 상징하는 이름을 내지 않은 주먹밥아줌마들이다. 2019년 5월, 뉴욕 '자유의 여신상의 햇불'과 오월 배지의 '주먹밥아줌마의 햇불' 두 개의 햇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社說

의혹투성이 조선대 군 간부 박사학위 특혜

조선대가 수업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군(軍) 간부 출신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혹의 당사자는 전 육군 대령출신 A씨로 현재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1차 진상조사에도 불참하고, 수업을 진행했다는 CCTV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학 본부는 진술서만으로 종결했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대는 지난 2014년 3월 '군·학 협약 체결'을 통해 군사학과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담당 교수들이 부대로 출강해 정규수업을 진행토록 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조대 노조가 부대를 통해 확보한 당시 위병소 출입일지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지난 단 2차례만 대학원 수업을 위해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와 같은 수업을 들었던 학생도 "2016년 2학기 때 A씨가 수업에 참석한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증언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년간(4학기) 재학기간 중 단 2차례만 출석해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쓴 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도교수들이 A씨가 수업을 받았다는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조선대는 이와 별도로 최근에도 모 교수가 아들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 참여하는 등 지도교수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학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2017년 9월 조선대에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렸으나, 대학 측은 수업을 담당하던 교수 3명의 진술서만으로 무혐의(?)로 처분했다. 지도교수들이 A씨가 수업을 받았던 점들을 고려해 자신의 집과 사무실 등에서 보충수업을 진행했고, 부족한 부분은 과제물로 대체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선대는 이와 별도로 최근에도 모 교수가 아들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 참여하는 등 지도교수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학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사학위는 전공과목 이수율 영어(외국어) 및 종합시험과 논문심사를 통과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가장 까다로운 학위이다. 그럼에도 진리탐구를 생명으로 삼는 대학에서 '학위비리 게이트' 사수기에 급급하고 있다면 대학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특혜의혹을 해소하는 것만이 대학교 A씨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해소가 우선

광주시는 오는 2020년 6월30일 해제되는 '공원일몰제'에 맞춰 지역내 9개 민간공원을 대상으로 특례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민간공원 1-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확정해 최종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감동평가 등 토지보상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2023년까지 이들 9개 공원 부지에는 아파트 1만2천600여 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의 지위를 취소하고 2순위 업체인 호반건설을 선정했다. 중앙 1지구도 도시공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가진 포기에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뀌었다. 이어 시는 사업자를 변경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약체결, 공인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감사 등 넘어야 할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여 비리 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난 관련자 처벌과 시정조치를 취했음에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에 따라 2단계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고, 광주경실련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로 인해 비위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업 차질 등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부실평가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 감사를 벌여 계약평가 점수 적용 오류 등을 적발하고 재평가를 거쳐 중앙 2지구 대상자로 선정된

불법성이 확인되면 협상자 선정 자체가 무산돼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 형사를 받고 징계를 받게 된다면 시 행정 전반의 신뢰도 추락도 불가피하다. 광주시는 특례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에 앞서 제기된 의혹들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순조로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현장칼럼



이정희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

2019 하노버 산업박람회를 참관하고

파트너국가로 참여해 독일과 한국 간 협력의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한국 산업의 국제적인 지도를 향상시키는 흥분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올해는 스웨덴이 파트너국가로 참가해 뉘르벤 총리가 직접 VIP로 참석했다.

올해 '산업간 융합-산업지능(Integrated Industry-Industrial Intelligence)'을 주제로 총 80개국 6천 500개 회사가 참가했는데, 한국에서도 약 100개 회사가 참가했다. 한편도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으로 결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해마다 4월이 되면 20여 만이 넘는 사람들이 산업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다. 무려 도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박람회를 다녀가는 셈이다. 그때는 호텔비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방 구하기도 어렵다.

어들이 찾고 있어 중국경제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 세계의 수소에너지 관련 업체의 부스가 생각보다 많이 눈에 띄었다. 미래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의 위상과 수소차의 눈부신 발전이 체감되었다. 하지만 그 속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없어 미래산업의 경쟁력이 있어 우리가 뒤처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컨벤션센터에서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인 BIXPO를 개최하고 있다. 한전이 대한민국의 대표 공기업이자 글로벌 전력회사로서 에너지 분야 신기술을 선도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국내 전력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지난해는 280개 기업이 참여하고 7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올해도 11월에 제5회 BIXPO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산업간 융합-산업지능(Integrated Industry-Industrial Intelligence)'을 주제로 총 80개국 6천 500개 회사가 참가했는데, 한국에서도 약 100개 회사가 참가했다. 한편도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으로 결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해마다 4월이 되면 20여 만이 넘는 사람들이 산업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다. 무려 도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박람회를 다녀가는 셈이다. 그때는 호텔비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방 구하기도 어렵다.

그날 한전공동관의 중소기업 대표들과 저녁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으로 대표기업들이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고 도전정신을 불어넣어 줘야 할 것이다.

7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세계최고의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비하면 아직 곁길마 수준이지만, 이번 기회에 이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한전의 BIXPO가 세계적인 산업박람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하노버 산업박람회처럼 파트너국가를 선정하고 VIP를 초청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장을 가보니 미래를 이끌고 나가는 에너지가 확연히 느껴졌다. 전 시민적어도 아마어마해 축구장 55개의 크기에 달할 정도다. 전시장에서 강한 인상을 준 것은 독일의 대표 기업인 지멘스의 거대한 전시부스였다.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디지털 전환의 최전선에 있는 지멘스의 위상이 생생히 느껴지는 현상이었다. 그 밖에도 각국의 공동관 중 특히 중국관은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한 디자인, 적극적인 홍보로 수많은 바이

한전도 2015년부터 매년 김대중호법' 등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혈중 알콜농도 기준 하향(0.05%~0.03% 이상), 법정형 처벌 강화, 면허 재취득시 2주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는 일부 운전자들이었다. 이에 운전자들은 핸들을 잡을 때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한번쯤 떠올릴 바란다.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의 가족,

하노버 시를 전 세계의 산업과 기술을 연결하는 도시로 성장시켰듯이 우리 BIXPO가 광주·전남지역을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수도'로 이끌고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자투고

음주운전은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

행락적이 되면서 야유회, 모음이 많아지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음주운전 근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술을 마신 후에는 이를 막강한 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 점심·저녁 식사 후 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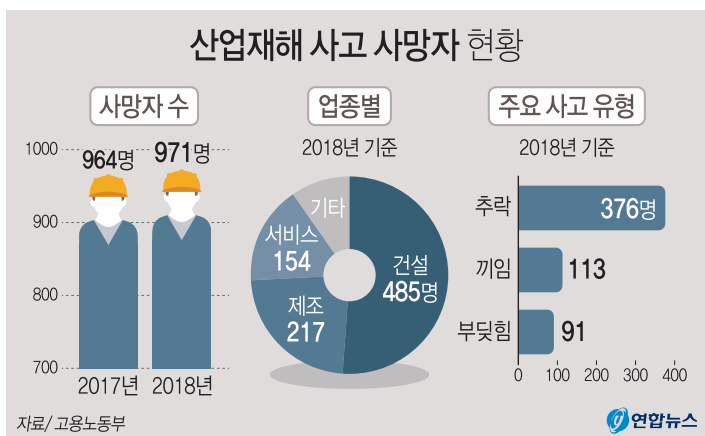
음주운전은 본인에게는 자살행위, 타인에게는 살인행위와 같고 모두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일명 '운창

가 빨라 적재물 낙하사고시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적재물 안전 조치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천4건으로 15명의 사망자와 1천547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같은 기간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단속 건수도 연평균 3.7%씩 증가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적재불량 차량 고발 건

수도 11.1% 늘었다. 이러한 개방형 화물차에 대한 안전 향상 방안으로 적재 불량 화물차의 고속도로 진입규제에 대한 방안이 하루빨리 시행돼 선량한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 및 혼잡 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기진·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그래픽 뉴스

산재 사고 사망자 작년 971명...산업안전은 아직 '후진국'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관련 제도 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된 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노동자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후진국형 산업현장을 개선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964명)보다 7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85명으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217명)과 서비스업(154명) 순이었다. 사고 유형으로 보면 추락(376명)이 가장 많았고 끼임(113명)과 부딪힘(91명)이 뒤를 이었다. 산재 사망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330명)과 5-49인 사업장(319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었음에도 전체 노동자 수 증가에 따라 '사고 사망 만인율'은 0.51%로, 전년(0.52%)보다 소폭 하락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킨다. 사고 사망 만인율도 건설업이 1.65%로, 다른 업종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와 산재 질병 사망자(1천171명)를 합하면 2천142명으로, 전년(1천957명)보다 9.4% 늘었다. 산재를 당한 전체 노동자는 10만2천305명으로, 전년(8만9천948명)보다 13.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고 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 재해자는 1만1천473명이었다. /연합뉴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재물 낙하 위험 개방형 적재화물차 규제해야

개방형 적재화물차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개방형 적재화물차에 대해 개선 방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방형 적재화물차는 적재물이 철제 구조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지 않거나 적재물을 감싼 덮개가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화물차로 자동차관리법상 일반형, 덤프형 화물차 전체와 특수용도형 화물차 중 일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개방형 적재화물차는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의 통행 속도

가 빨라 적재물 낙하사고시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적재물 안전 조치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천4건으로 15명의 사망자와 1천547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같은 기간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단속 건수도 연평균 3.7%씩 증가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적재불량 차량 고발 건

수도 11.1% 늘었다. 이러한 개방형 화물차에 대한 안전 향상 방안으로 적재 불량 화물차의 고속도로 진입규제에 대한 방안이 하루빨리 시행돼 선량한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 및 혼잡 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기진·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